

# “3·8개각 실패” 고개속인 靑 비서실장, 조국 지키기?

조동호·최정호 등 인사 논란에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인사문제 국민께 심려끼쳐 송구”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청와대 실장들. /연합뉴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최근 불거진 ‘3·8개각 인사 논란’과 관련해 사실상 고개를 숙였다. 노 비서실장의 사과는 4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의 제4차 전체회의(청와대 업무보고) 때다.

노 비서실장은 “최근 인사문제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 검증은 보다 엄격하게 하겠다”며 “(또) 대통령비서실은 국민과 국회의 목소리를 더욱 무겁게 듣고 대통령을 보좌하겠다”고 했다.

노 비서실장이 이렇게 밝힌 이유는 지난달 31일 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

자를 지명철회한 것과 연관이 깊다. 지명철회 절차를 밟은 조 후보자는 국회 인사검증 절차에서 ‘해적학술단체 참석’ 및 ‘장남 특별채용 의혹’을 직면해야 했다. 그뿐인가. 조 후보자의 지명철회가

있던 날,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 절차를 밟았다. 최 후보자는 국회 인사검증 절차 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더욱이 이들 장관 후보자들이 직면한

논란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1월22일 발표한 병역기피·세금탈루·불법 재산증식·위장전입·연구 부정행위·음주운전·성(性) 관련 범죄 등 7대 비리 배제 원칙과 궤를 달리한다. 문 대통령은 이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인사는 고위공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그런데 노 비서실장이 운영위 업무보고 때 고개를 숙였음에도 야당에서는 질타가 이어졌다.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국회에 출석해 이를 해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양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번 전체회의 때 “(이번 회의 때) 조 민정수석은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 상태이기 때문에 신속한 국정현안 대응을 위해 불참한다’고 전했다. 차라리 ‘인사 실패 때문에 면목이 없어서 못 왔다’고 하면 이

해하겠다”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그동안 민정수석은 국회 국정감사 및 업무보고 등에 불참하는 게 관례였다. 청와대 주요 보좌진이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야 하는 게 민정수석의 업무이기 때문이다. 또 대통령 친인척 및 공직자 비리 관리 등 민감한 업무를 맡기 때문에 국회 출석에 거리를 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가 열린 날,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제63회 신문의 날 행사에 참석했다.

한편 이번 운영위 전체회의에는 청와대에서 노 비서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비서관, 김연명 사회수석비서관, 윤종원 경제수석비서관, 이용선 시민사회수석비서관, 이정도 총무비서관, 주형철 경제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etroseoul.co.kr

## “직무역량 갖춰” 진영 청문보고서 채택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행안위, 적격·부적격 의견 담아 “미세먼지 대책 등 추진의지 있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진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은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장관 후보자 7명 중 낙마한 두 후보자를 제외한 5명 가운데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세 번째다.

행안위는 진 후보자 청문보고서에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모두 담아 채

택했다. 행안위는 보고서에서 “높은 전문성과 정책적 이해도 등을 고려할 때 충분한 수준의 직무수행 역량을 갖췄으므로

적격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적격’ 이유로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자치경찰제 도입, 미세먼지 대책 등 현안에 대한 적극적 추진 의지와 철저한 자기 관리, 보건복지부 장관 역임 당시 보여준 소신과 행정경험 등이 거론됐다.

이로써 청문보고서 채택 절차가 남아 있는 후보자는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 등 2명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두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돼 난항이 예상된다.

/석대성 기자 bigstar@

## 캐나다 철강 세이프가드서 한국산 제외

7개 품목 중 5개 제외, 2개 권고

캐나다 국제무역심판소(CITT)가 3일(현지시간)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에서 한국산을 전면 제외했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CITT는 이날 발표한 철강 산업피해 조사결과 및 최종조치 권고안에서 한국산은 자국 산업 피해의 주된 원인이 아니라며 세이프가드 조치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CITT는 조사 및 잠정조치 대상 7개 품목 가운데 에너지 강관, 열연, 칼라강판, 선재, 철근 등 5개 품목에 대해서는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최종조치에서 제외했고 심각한 산업피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스테인리스 강선, 후판 등 나머지 2개 품목에 대해서만 최종조치 실시를 권고했다.

이들 2개 품목에 대해서도 심각한 산업 피해나 실질적 위협을 끼치지 않는 경우에 세이프가드로부터 제외하도록

한 한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에 따라 한국산 철강제품은 결국 제외됐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이번 권고안을 바탕으로 캐나다 정부는 관련국 협의 등을 거쳐 현재 시행 중인 잠정조치가 종료되는 다음달 12일 이전에 최종조치를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권고 내용이 캐나다 정부에서 승인되면 현재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잠정조치는 5월 12일까지 종료된다.

앞서 캐나다는 지난해 10월 11일 미국 철강 232조 조치 및 유럽연합(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잠정조치에 따른 캐나다 수입 증가를 우려해 7개 철강제품에 대해 조사를 개시한데 이어 10월 25일 세이프가드 잠정조치를 전격적으로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때부터 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100%를 초과하는 물량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관세협정(TRQ)을 잠정 시행해왔다.

/연합뉴스

## 공직선거법·비리수사처 설치·근로기준법·빅데이터... 국회, 쟁점법안 산적... 여야 합의 이룰까

오늘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연동비례제 개정안 내년 도입위해 3월 국회 패스트트랙이 ‘골든타임’

여야가 5일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쟁점 현안 처리에 나선다. 거듭 공전하던 여야가 이번 임시회를 어떻게 마무리할지 관심을 모은다.

현재 국회에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개정안 ▲빅데이터 3법(신용정보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등 처리해야 할 주요 쟁점 법안이 산적했다. 하지만 여야가 이를 두고 막바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다.

먼저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정수 300석을 유지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일부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을 내년 21대 총선에 도입하기 위한 ‘골든타임’은 3월 국회까지다. 이번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으로 가결돼야 내년 총선부터 도입 가능하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개정 초안에 대해 합의했지만, 각 당 추인을 받는 단계에서 당내 반발에 직면했다. 민주당은 5·18 특별법 동시 통과라는 조건을 내걸었고, 바른미래당은 선거제 개편안과 함께 신속처리안에 태울 공수처 설치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입장을 달리했다. 바미당은 공수처 권력 비대화를 막기 위해 수사·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단 의견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앞서 지난 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찾아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지만, 원내대표는 “입장이 달라 논의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 위원장 임이자 의원도 홍 부총리 등을 향해 “산업 현장의 목소리

를 들어보니 쉽게 밀어붙일 게 아니다”라며 “5일까지(국회 처리는) 어렵다”고 일축하기도 했다.

4차산업 시장 발전을 위한 빅데이터 3법(데이터 경제 3법)도 국회에 묶여있다. 현행법상 오프라인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온라인은 정보통신망법, 금융 분야는 신용정보법이 적용된다. 이번 3법은 각 분야에서 지나치게 높은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개인정보 데이터의 결합 및 데이터 전문기관 설립의 법적 근거를 정립, 개인정보 개념체계를 명확히 해 빅데이터 분석의 규제를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세 법안을 처리할 상임위원회가 각기 달라 법안 통과는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여야는 앞서 지난 1월 손해원 무소속 의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말한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두고 공전을 거듭하다 임시국회를 흘려보냈다.

/석대성 기자

## 최순실, 구속만료... 미결수→기결수 전환

입시부정 징역 3년형 집행 시작

국정농단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최순실씨(사진)가 4일 자정을 기해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구속기간이 이날로 끝나면서, 지난해 확정된 입시부정 사건(탈·정유라를 이화여대에 부정입학 시킨 사건)으로 선고받은 징역 3년형의 집행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되지만 최씨의 ‘감방생활’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상당기간 현재 수감 중인 서울동부구치소에 그대로 지내고 한동안 노역도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 기결수가 되면 구치소에서 교도소는 미결수 등을 일시적으로 수용하



는 시설인 반면, 교도소는 확정된 형을 집행하는 곳이고, ‘징역’이라는 것이 일정기간 노동을 하도록 강제하는 형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핵심사건인 국정농단사건의 상고심이 아직 대법원에 계류 중이어서 최씨가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를 드나들어야 할 일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한동안 이감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최씨가 노역을 하게 될 경우 다른 수용자들과의 접촉과정에서 우발사건이 생길 우려가 있어 노역도 일단 부과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용진 기자 ohngbear@